

한국이 늘 '을'인 한·미·일 삼각구조

한승동의 독서무한

[한겨레]

한승동 기자

한승동의 독서무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장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들의 회동은 예상대로 3국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는 퍼포먼스로 끝났다. 주역 미국의 중재로 한·일 두 엑스트라 간 깨어진 공조를 복원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글썽, 복원할 만큼 한·일 관계가 파탄난 적이 있었나. 둘 사이엔 파탄의 제스처와 요란한 파탄 소동은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1965년 국교 회복 이후 진짜 파탄을 맞은 적은 없었다. 미국이 있는 한 파탄은 불가능했다. 한국엔 한·일 관계를 파탄낼 자유조차 주어진 적이 없었다.



한승동 문화부 기자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내는 <일본 비평> 제10호에 실린 중국 대외정책 연구자 조아라의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보면, 1965년의 한일 국교 교섭 타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결정적이었다. '현대 일본의 보수 그리고 우익'이라는 특집의 하나인 이 글에 따르면 미국이 한·일 교섭에 적극 끼어든 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존슨 정부가 아니라 그 전 케네디 정부 때부터였다. 베트남전 본격 개입과 쿠바 위기, 중국의 핵실험 성공 및 냉전 격화로 미국한테 동아시아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 간 관계 복원과 그를 통한 삼국 반공동맹체제 강화가 절실했다. 과도한 달러 증발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하면서 미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경제대국으로 부활하던 당시 일본에 더 큰 역할을 떠맡도록 종용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국교 교섭 초기 타결을 압박하면서 일본엔 거북했던 한국의 대일 배상청구의 성격과 규모까지 바꿔버렸다. 그리하여 배상청구금은 독립축하금·경제협력금으로 바뀌고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의 빚을 갚는 전범

국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에 은혜를 베푸는 시혜국이 됐다. 따지고 보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 한·일 국교 교섭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동한 게 미국이었다.

총액 등을 결정한 오히라-김종필 합의(밀약) 뒤에도 미국이 있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일이 사실상 공모한 ‘독도 문제’의 애매한 처리가 오히라-김종필 밀약에서도 일본에 한층 더 유리한 방향으로 언급됐을 가능성이 짙다. ‘갑’은 언제나 미국의 요구를 재가며 속도조절까지 할 수 있었던 일본이었다. 고령인 김종필씨가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줄까.

헤이그의 한·일간 알력 봉합과 한·미·일 3각 공조 재확인으로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가속화 등 3국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대중국정책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일본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과거사 문제는 유야무야 다시 가려지고, 면죄부를 받은 아베 정권은 의기양양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한국은 북핵 대응 공조 강화라는, 동족에 대한 적의 재확인 외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한국이 언제나 ‘을’ 신세가 되는 이 괴상한 한·미·일 세력 구조. 그 역사는 미국이 일본의 조선 강점을 보장해준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언제나 일본이 ‘갑’이고 한국·한반도가 ‘을’이 되는, 냉전기에 절정에 달했던 미국 주도의 이 괴상한 공조체제는 지금 그 대상만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건재하다. 피해의식에 함몰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이 괴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한승동 문화부 기자 sdhan@hani.co.kr

기사등록 : 2014-03-30 오후 07:55:03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